

Online Series

2014. 8. 21. | CO 14-12

한국의 핵무장 찬반양론과 틀에 갇힌 사고

홍우택(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얼마 전 언론에 실린 기사의 머리글이다. 기사의 내용은 무시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 내 핵무기 보유론을 잠재우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찬반양론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틀에 갇힌 사고를 하고 있다고 서로 폄하하기에 바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서로는 하나이면서도 상대방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핵무기 반대론을 주장하는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핵무기 불가론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쪽 동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렇다고 핵무기 보유론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간과하거나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던져 균형이 잡힌 시각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첫째,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표를 걸면 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다. 그들도 핵무장을 옹호하는 측을 보수라고 지칭하며 글을 풀어 나간다.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핵무장을 주장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와 핵무장 찬성 그리고 진보와 핵무장 반대는 옳지 않게 짝을 지우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쳤다. 그러나 같은 진보성향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동일한 성향의 트루먼은 일본에 핵무기 투하를 결정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 모두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와 진보로서 안보와 평화를 추구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것들을 추구하는 방법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이다.

둘째, 그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지하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꼽고 있다. 한반도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북한이 모두 핵을 보유하게 되면 선제공격을 감행할 유혹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북한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지만, 남한과 북한 상호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들 주장의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면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억지하는 방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면 남한과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은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질 수 없다.

북한이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핵무기의 용도가 공격용이라는 말과 같다. 만일 핵무기가 공격용이라면 남한에 핵이 있건 없건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를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결국 핵무기의 용도를 뒤죽박죽으로 가정하게 되면 그들과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다. 사실 핵무기의 용도가 공격용인지 아니면 방어용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었고 방어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공격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단 한 차례로 2차 대전 말기 핵무기가 없는 일본을 미국이 핵으로 공격한 경우다. 한 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긴 힘들다. 장담할 수 없다면 북한은 현재에도 선제공격의 유혹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덧붙이면 한반도와 같은 작은 땅덩어리는 선제공격의 유혹 여부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다. 단지 상대적인 핵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 다섯 개로 상대방 영토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면 핵무기를 다섯 개 보유하거나 10개 보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핵무기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고 또 땅 속 깊숙이 숨길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땅덩어리가 작다고 선제공격의 유혹을 가질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주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미군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핵우산으로 핵전력의 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남한은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선제공격의 유혹을 갖지 못하고,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전력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북한은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과 같다. 어쩌면 이들은 미국의 핵전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균형이라기 보다는 전력의 우월성이 억지한다고 답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작은 땅덩어리에선 핵무기의 숫자로 전력의 우월을 말하기는 힘들다. 작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논리전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그들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에도 반대를 한다. 그 이유로는 전술핵의 재배치가 “북한에 한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 하기 보다는 “미군에의 군사적 종속이 재개됨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군은 미국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라는 북한과 중국의 견해를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수용하고 독자적인 핵개발이 불가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일까?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남한의 안보는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간다면 미국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안보는 튼튼하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

또한 이들은 남한이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재래식 공격에 대한 사전 억지효과는 작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대남 억지력도 비무장지대에 전진 배치된 군사력과 서울 북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포 및 로켓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억지력이 재래식 전력 이상의 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요약하면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지효과가 핵에 의한 억지효과에 버금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반은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 이상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중에는 핵을 가진 국가들 간의 전쟁들도 있었고, 핵을 갖지 못한 국가가 핵을 가진 국가와 벌인 전쟁들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대부분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치러졌다. 엄밀하게 말하면 핵무기가 전쟁을 억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핵무기가 전쟁에 사용된 것은 한 번뿐이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쟁이 치러졌기에 재래식 무기의 우월여부는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이러한 점만을 놓고 보면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느니 재래식 무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은 그렇지 않다.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치러졌던 까닭은 서로 상대방의 핵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재래식 전쟁으로 일본을 제압하는 것을 벽차했던 미국이 일본의 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이었다. 재래식 무기 전력은 핵무기가 있다 하여도 중요한 것이긴 하나, 재래식 전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핵무기가 지닌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그들은 국제사회의 법적·제도적 제약들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본다.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한 지도적 국가’가 NPT나 IAEA를 탈퇴하고 유엔 안보리나 개별국가들의 제재를 받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급이 중단되어 원자력발전 가동이 멈추게 되는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생각하면 두 학자의 주장은 패배의식에 가깝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는 국가다. 이런 나라가 핵무장은 고사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한심한 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에서는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는 도덕과 체면을 중요시 하는 국가라는 것을 내세우고 무엇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해야 할 행동이 국제사회의 협력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협력을 위해 우리가 높여야 할 목소리는 어느 정도 강해야 할까?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게는 된 것일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여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미국에 의한 확장역지가 남한의 독자적인 핵보유에 의한 역지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든다. 미국의 핵역량이나 기술은 그 어느 국가도 의심을 품을만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한다. 한국이 그 수준에 맞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공백은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기에 발생하는 공백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증명이 되었듯 미국의 핵보복 의지는 북한을 위협할 만큼 확실하지만,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보복 의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동맹은 안보를 강화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그들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협조를 강조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만큼 우리만의 독자적인 안보역량도 키워야 한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의 ‘정치군사적 지휘 통제권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 한국에서 미군을 위협에 노출시키려 할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미군을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의 주장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 하는 것이 미군에의 군사적 종속이라면,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는 것은 독립적인 안보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이 안보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한다면, 소위 동맹관계로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동맹은 서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있는 한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나더라도 걱정 없다고 스스로 위안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도움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글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핵무장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에 실린 핵무장 반대론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역량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틀에 갇힌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짚어보려고 한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소명이고 또 이를 위해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시중의 자기 계발서는 틀에 갇힌 사고를 버리라고 한다. 국가전략 계발서가 있다면 어떠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